+

# 서삼석, '전남 통합국립의대' 정부·국회 관심 강력 호소

민주당최고위원회의

붕괴 수준 의료현실 지적 대책 촉구 "필수의료 전문의 서울과 10배 격차 중증환자 他지역 유출률 51.2% 달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남의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설치를 정 부와 국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서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 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의 시 급함을 강조했다.

그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 의료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남은 노인 인구(26.1%), 장애인(7.52%), 치매 환자(4.4%) 비율이 높아 의료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임에도불구하고 22개 시·군 중 17곳이 의료 취약지로분류된다.

특히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1천명 당 필수 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이 3.02명인 반면, 전남은 0.29명에 불과해 무려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로 인해 전남의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 (19.9%)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 또한 53.8%로 전국 평 균 (72.2%)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러한 의료 공백의 해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심 사를 언급하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추진에 힘 을 실었다.

그는 "이는 유사한 규모의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라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했다.

서 최고위원은 정부를 향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양 대학 총장제를 유지하는 유연한 통합 특례 적용 ▲예 비평가 인증 등 제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 구했다.

아울리 지역 내 중증 의료를 담당할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양쪽 캠퍼스에 각각 설 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 근거 법안을 언급하며 "지역의사제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의사 양성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치며 "전남의 의료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다"며 "전남 통 합국립의대 신설이 도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진수기자



군은 표정의 민주당지도부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오른쪽)·한 준호 최고위원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기부 대 양여' 한계 명확…국가 주도 추진해야"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정 당위성·구체적 방향 집중 논의 민형배 "올해안 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 추진의 한계점이 분명한 만큼 국가 주도 이전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과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은 24일 국회의원회관제 1소회의실에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 았다. 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 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 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 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대구·수 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 대 양 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 을 집중 논의했다.

손승광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조성·이전·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 임져야 한다"며 "개발 이익에 의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 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 적했다.

한상원 회장도 "기부 대 양여 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

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통해 이미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에 앞서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합의 하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온 대구-경북의 경 우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중 단된 상태다.

기우식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 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시가 무 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 간·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 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으로 이제 할 일은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 신수정 市의회 의장, 국토부장관에 현안 건의

#### 호남고속道 확장 국비 분담률 상향 등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24일 김윤덕 국토 교통부 장관을 만나 광주 핵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

이날 면담에서 신수정 의장은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실무 관계자들에게 광주시의 미래 먹거 리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 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신 의장이 건의한 핵심 현안 사업은 ▲광주 AI 모빌리티 사업 투자 확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국비 분담률 상향(방음시설 국비 지원)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등이다.

신수정 의장은 "건의한 사업들은 광주 전체 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



드시 해결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교통 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기대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 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광주지역 현안의 시급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균형발전 측면 에서 실무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 겠다"고 답했다. /변은진기자

### 정준호, 의정보고회 순차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24일 "'2025년 1차 의정보고회'(두암동·문화동·석곡동·풍향동)가 시화문화마을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6건의 상법 개정안 발의 ▲광주 미래

산업 AI 모빌리티 예산 정부안 반영 ▲광주 송 정역 인근 개발·증축 ▲호남선 KTX 증편 대책 ▲북구 수해 복구·방지 대책 마련 ▲광주역 인 근 노후·위험건축물 피해 주민 지원 등 주요 활 동과 성과를 보고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주 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당면 지역 과제를 정책으로 실현해 광주의 미래 성 장동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의 의정보고 회는 오는 28일 광주YWCA

대강당(신안동·임동·중앙동·중흥동), 12월6 일 북구청소년수련관 대강당(문흥동·우산동 ·오치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